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행정력 집중

전주시, 시민 생명·재산 보호 위해 주요 하천 안전점검·재해예방사업 등 추진

전주시가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 대비에 총력을 펼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3개 국가하천(전주천, 소양천, 만경강)과 16개 지방하천(삼천 등), 13개 소하천(안산천 등) 전주지역 주요 하천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홍수기 전까지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홍수 피해 예방 및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기울이라고 밝혔다.

중점 점검 사항은 △제방·호안, 산책로, 배수문(15개소), 가동보(4개소) 등의 유지·관리 상태 △하천수 흐름에 지장을 주는 각종 장애물 현황 △진행 중인 하천공사 현장 등이다.

시는 본격적인 우기에 앞서 읍급조치 및 현장 순찰을 강화해 재해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올해도 안전한 하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퇴적토(전주천 객사천 합류점, 완산교, 백제교) 제거와 고사 식물·잡목 제거(전주천 승암교~진북교, 삼천 세내고~서곡교) 등 재해



전주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3개 국가하천과 16개 지방하천, 13개 소하천 등 전주지역 주요 하천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예방 하천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동시에 시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하천 산책로 조도 개선과 풀베기, 화장실 설치, 무단 쓰레기 제거 등 하천 환경 개선사업도 전개한다.

이와 함께 여름철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해예방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지역단위로 방재시설을 통합(범프장, 하수도, 하천 등)해 재해 위

험 요인을 일괄 해소하기 위한 '홍수해 생활권사업'으로는 총 440억 원을 투입해 조촌 홍수해생활권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뿐만 아니라 시는 △미산(360억 원) △격사천(368억 원) △월평(461억 원) △공덕(250억 원) 등 4개 지구에 대해서는 재해위험별로 지정된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정비하는 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을 전개한다.

여기에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사면

을 보수 보강하는 급경사지 정비사업으로는 서서학동 성결지구(5억 원)와 서서학 10지구(20억 원)를 마무리한 데 이어, 현재 중화산동 도로리골지구(83억 원)와 우이동 아중호수길지구(70억 원) 등에 대한 붕괴위험지구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끝으로 시는 저지대에 급속히 증가하는 빗물을 일시적으로 가두는 시설인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는 사업이 완료된 전주초지구(125억 원)와 매화지구(171억 원), 송천1지구(254억 원)에 이어 지난 2020년 침수 피해가 발생한 평화동 신성공원 일대 도심지 침수위험요인을 해소하고자 총 272억 원을 들여 신성공원 내 지하저류조를 설치하고 학소제를 정비하는 학소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철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하천의 지속적인 정비와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과거 침수 피해 등 재난사고가 발생했거나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도 위험 요인을 제거해 시민들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동물원 주변 교통정보 실시간 제공

봄 행락철 주요 정체 구간 원활한 교통환경 위한 시스템 구축

봄철을 맞아 많은 방문객이 몰리면서 주요 진출입로에서 차량 정체가 빈번하게 발생해 온 전주동물원 주변에 대한 교통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전주시에 따르면 봄 행락철 주요 정체 구간인 전주동물원과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창의체험관 일대에 교통정보 제공용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교통안내전광판을 통해 실시간 교통흐름 영상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주시민과 관광객에게 실시간 교통 소통정보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또 교통정체 완화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 확보, 교통량 증가에 대응한 신속한 신호 조정 및 효율적인 교통전담인력 배치도 가

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전주시 교통정보센터 누리집(www.jonjuits.go.kr)을 통해 교통정보 CCTV와 노면기차국 등을 통한 교통 관련 실시간 소통정보, 출발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시는 향후 동부대로에도 교통안내전광판과 교통정보 CCTV 등 교통시설물을 확대 설치해 시민들에게 보다 신속한 교통정보를 추가 제공할 계획이다.

최준범 전주시 대중교통국장은 "동물원을 찾는 방문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동물원 뿐만 아니라 전주시 전역에 스마트 교통 기술을 적극 활용해 시민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114억원 융자 지원

전주시가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 주기 위해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시는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총 114억 원 규모로 '2025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매월 점수를 받을 예정으로, 전주시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이면 업체별로 최대 3억 원(소상공인은 2000만 원 이내)까지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보전받을 수 있다.

연간 매출액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5000만 원 이하의 신청 업체는 신청 금액 전액에 대한 보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업종은 △제조업 △음식업(시내버스·법인택시) △지정 음식업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 △벤처기업 △기술 우수 기업 △중소 수출업체 △사회적 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업체 등 폭넓게 설정됐다.

대출은 전주지역 9개 은행(전북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KDB산업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수협은행)에서 취급하며, 최대 3.5%의 이차보전율이 적용된다.

일반 기업은 3.0%, 여성·장애인기업, 벤처기업, 우수항토기업 및 이노비즈기업 등은 3.5%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융자 기간은 2년으로 1회 연장 시 총 3년까지 가능하다.

/권희성 기자

“정부, 대광법 일부개정법률안 즉시 공포해야”

전주시의회, 박형배 의원

대표발의 촉구 건의안 채택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가 정부에 대광법 일부개정법률안 즉시 공포를 촉구하고, 전주시의 광역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국고 지원을 건의했다.

시의회는 지난 11일 열린 제41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박형배(효자5동)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즉시 공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박 의원은 건의안에서 "인구 64만명의 전주시는 현행 법령상 대도시권에



전주시의회가 정부에 대광법 일부개정법률안 즉시 공포를 촉구하고, 전주시의 광역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국고 지원을 건의했다.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교통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주는 2036년 올림픽 유치를 위해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이 필수"라며 "국회에서 이미 통과된 대광법 개

효자2동 새마을부녀회, 어르신 영양 찰밥 봉사 펼쳐

전주시 완산구 효자2동(동장 박시용) 새마을부녀회(회장 권현숙)는 지난 8일 효자장태우의 후원을 받아 관내 순효당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영양 찰밥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영양 찰밥과 말반찬 및 후원받은 떡, 과일, 음료수 등을 대접하며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권현숙 새마을부녀회장은 "영양 가

득한 찰밥과 말반찬, 떡, 과일, 음료수 등을 정성껏 준비했으니 맛있게 드시고 어르신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효자2동 새마을부녀회는 경로당 찰밥 봉사활동 외에도 복지관 배식 봉사, 환경정화 활동, 명절 이웃돕기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해서 펼치고 있다. /권희성 기자



/권희성 기자

우아2동·지사협, 재전마당에 착한가게 현판 전달

전주시 덕진구 우아2동주민센터(동장 민웅기)는 지난 11일, 우아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종선) 위원들과 함께 착한가게에 동참한 '재전마당'을 방문해 착한가게 현판식을 진행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재전마당 오남석 대표는 "우아2동 주민자치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우리동을 위한 일을 늘 고민해왔다"라며,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착한가게'를 알게 되어 참여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인자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권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